

사회과학 관련 싱크탱크의 역할: 무엇이 싱크탱크를 강하게 하는가?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이 발표한 전 세계 182개국의 6,600여 개 싱크탱크를 평가한 결과 브루킹스연구소가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싱크탱크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국내 언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50위권 안에 일본은 2개 중국은 3개의 싱크탱크가 포함된 반면, 한국은 하나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평가와 진단은 싱크탱크의 경쟁력은 정부나 재벌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가 여부, 재정적 독립, 일관된 연구목적과 방향설정을 지적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에 부응하는 정부의 지원과 국가의 대규모 자원 투입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모두 싱크탱크의 영향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브루킹스는 우수한 연구진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비정파적인 특성을 가지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핵심은 각 분야에서 주목도 높은 연구실적을 내놓고 있고 그 연구결과가 인용되는 빈도수에서 단연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주목도 높은 연구결과물의 산출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싱크탱크로서 생존하고 실적을 쌓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결과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싱크탱크가 지향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의견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논쟁이 있어야 발전을 위한 준비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본고를 작성했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01.23) 발표자료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사회과학은 과학인가?
3. 한국 사회과학연구의 특성
 - 가. 이론연구 · 지역연구 · 정책연구
 - 나. 국내학계의 정치학 및 국제관계연구의 경향
4. 반론과 재반론
5. 결론: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들어가는 말

- 환경비즈니스에 따르면 국내 외교안보 분야에 약 30여 개의 연구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부출연 연구기관, 독립적인 민간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평가 기준에 따르면 연구원의 영향력, 연구의 질, 연구역량의 세 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종합점으로 합산하여 순위를 정했음.
 - 평가기관이 제시한 기준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정책연구기관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함.
- 사회과학 분야의 싱크탱크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를 통해서 연구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연구사업 수행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싱크탱크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중립적 입장에서 장기적 관점에 정책입안의 기초가 되는 각종 시스템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독립기관으로 두뇌집단, 지식집단이라고 불림.
 - 싱크탱크는 정책과 관련된다고 해서 정책만 논의하고 이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관한 이론연구를 통해 지식산업 분야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싱크탱크는 연구기관(research institution)이라고 할 수 있음.
- 사회과학 관련 연구원의 책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선 수행해야 할 과정이 있음.
 - 국제관계 또는 평화연구가 사회과학의 한 분야라는 사실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사회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정치학의 연구 경향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기초해서 정치학 그리고 국제관계연구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 사회과학의 기준, 국제관계연구의 방향에 대한 기준을 논의하고 이에 대해 제기되는 방법론상의 이견 및 다양한 논란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본고가 지향하는 목표는 연구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과업에 대해서 방향을 고민하는 시도로 의미가 있음.
 - 싱크탱크가 수행하는 연구를 이론연구, 지역연구, 정책연구로 대별하여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고찰하고 연구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연구의 방향도 논의하고자 함.

- 싱크탱크의 주요 과제로 평가되는 정책연구에 대하여 국제관계 분야가 가지는 학문적 역할을 평가하고 정책제언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

2. 사회과학은 과학인가?

-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다루는 과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에 대한 요구조건을 완화하여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 분야’라고 정의됨.
- 국제관계학을 사회과학의 한 분야라고 정의한다면 과학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음.
 - 과학이란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지식의 체계’를 의미하여 인류가 경험주의와 실증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지식이라고 정의
 - 과학이 다루는 핵심은 ‘사물이나 사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인간의 지적활동으로 보다 협의로 정의할 수 있음.
 - 과학의 정의는 원래 자연계의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지식체계를 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자연과학이 주를 이루었으나 인간의 행동 그리고 인간이 모여서 이루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검증을 통해 얻어낸 지식을 사회과학으로 수용함.
- 사회과학은 진정한 과학이 아니라 유사과학(pseudo science)으로 순수 과학이나 응용과학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진 영역으로 간주
 - 과학은 관찰된 현상에 대해 연구자가 인과율(cause and effect)이 있다고 생각되는 개연성 또는 가능성이 높은 가설(hypothesis)이라는 논리적 명제를 실험을 통해서 확실성이 인정되는 이론(theory) 그리고 일반적인 법칙(principle)으로 발전시키는 과정
 - 사회과학은 인간과 사회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므로 사람, 기업, 사회, 국가를 상대로 사실상 실험을 수행할 수 없고 실험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
 - 일부 사회과학에서는 경험과학 또는 실증주의의 이름으로 통계학의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주요 변인을 통제함으로써 자연과학과 유사한 실험의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에서 유사과학으로 명칭
 - 최근에는 경제학 또는 경영학 일부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변인을 통제하는 인위적 실험(artificial experiments)의 도덕적 제약을 극복하는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s)을 도입했지만 정치학이나 국제관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많음.

사회과학은 진정한 과학이 아니라 유사과학(pseudo science)으로 순수과학이나 응용과학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진 영역으로 간주

**과학은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해야 함. 이는
어떠한 과학적 원칙도
불멸의 진리이거나
참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다만 틀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뿐임**

- 사회과학에서 수행하는 연구가 갖추어야 할 핵심은 “어떤 사실에 대하여 안다는 지식의 명제”가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는 과학적 방법론이 선행조건임.
- 과학적 방법론은 통계나 실험과 같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 검증과정에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밝히는 방법이 논리적이어야 하며 통제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함.
- 전쟁의 발생이나 경제적 발전과 같은 사건에 대한 원인을 점성술을 통해서 설명하거나 선거 결과를 특정 후보의 생년월일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방법은 실제로 그 결과가 일치했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이라고 할 수 없음.
- 과학은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해야 함. 이는 어떠한 과학적 원칙도 불멸의 진리이거나 참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다만 틀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뿐임.
- 과학을 판별하는 기준의 하나로 반증가능성(falsifiability), 즉 틀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인데, 실험이나 관측의 검증과정을 거칠 때 반대 증거에 의해서 가설의 오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의미로 시험 가능성 또는 반박 가능성이라고 함.
- 반증가능성의 원리에 따르면 정치학에서 투입과 산출로 구성되는 체계이론은 모든 유기체나 제도와 조직에 어떤 것이 들어가면 무언가는 나온다는, 항상 참이라는 점에서 반증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과학적 이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관측하고, 시험 및 재현의 과정을 거쳐서 반증의 가능성을 배제할 때, 주어진 가설을 수용하는 데, 과학자는 확실히 맞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틀리지 않았음을 알았을 뿐이라고 하는데 이는 반증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의미임.

3. 한국 사회과학연구의 특성

- 통상적으로 국제관계연구는 이론연구, 지역연구, 정책연구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들 세 가지 분야가 상호 배타적인 분류체계로 생각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지역연구와 정책연구는 혼합되어 있음.

가. 이론연구 · 지역연구 · 정책연구

- 지역연구는 한 차례 발전을 거쳤지만 최근에 와서는 국내에서도 정체

성과 방향성의 인식에 혼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지역연구는 정확한 개념 정의가 어렵지만 ‘자신이 중심이 되는 모국 이외의 타 지역과 국가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지적 인식 방법’으로 정치학의 국가사례연구(case study)와 분리되는 것으로 정의하거나” ‘해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지식의 축적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지적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음(전승홍 2002, 30-33).
 - 지역연구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국민들의 해외관광, 정부의 외교정책 영역의 확대를 통해 해외진출과 대외접촉의 다변화와 증가에 따른 정책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발전했다는 점에서 정책연구와 혼합되어 있다고 평가됨.
 -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구미학계에서는 케네디 시절 제3세계에 관한 연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역연구가 부흥을 맞았지만 80년대를 지나면서 학문적 공헌도 면에서 혹평을 받고 제도적으로도 독립학문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음(조기숙 1998, 14).
 - 지역연구의 관점에서 과학적 연구 또는 실증주의적 연구는 인과관계의 규명과 법칙정립에 장점을 지녔지만 구미편향적인 시각으로 학문을 칸막이 구조로 세분화하여 지식의 파편화를 초래했고 사물과 현상의 부분적 이해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하여 지역연구는 총체적 접근을 통한 분석과 이해가 가능한 대안적 접근법이라고 주장함.
- 정책연구는 정책학이라는 독립된 다른 학문 분야가 존재하면서 정책과정에 대한 지식과 정책내용에 대한 지식이 통합된 학제 간 연구 또는 연합 학문적 성격을 가진 분야로 인식하며 사회과학만이 정책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음(오철호·최영출 2010, 418).
- 정책학이 정책이라는 표면적 성격을 강조하여 외교정책, 경제정책, 보건정책, 환경정책, 교육정책, 통일정책, 교통정책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외교정책과 관련한 정책연구는 정책결정과정에 중점을 두는 행정학이나 정책학이 연합해야 하는 학문이 국제관계학이라는 점에서 주요 관심의 대상으로 하는 특정 국가나 지역을 연구의 주제로 선정됨.
 - 정책연구는 정부정책의 채택, 수정, 종결의 과정에 관한 기술적·경험적 연구와 규범적·처방적 연구로 대별됨. 기술적·경험적 연구는 정책의 원인과 결과를 연구하고 과학적 추론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뢰성이 높고 보편성이 있는 지식을 산출하는 과정이며 규범적·처방적 연구는 정책분석을 통한 정책의 선호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연구로 정책처방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함.
 - 정책연구에서 경험적 연구는 사실상 이론연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정책에 대한 실증적 접근법에 따라 사실을 묘사하거나 인과관계를

통상적으로 국제관계 연구는 이론연구, 지역연구, 정책연구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들에게 가지 분야가 상호 배타적인 분류체계로 생각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지역연구와 정책연구는 혼합되어 있음

**이론연구는 앞에서
과학에 대한 논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논리적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법칙과 같은 명제,
즉 지식을 생산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하는
연구를 말함**

밝히는 과정으로 경험적 연구는 인과이론을 전제로 가설을 설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과학으로서 사회과학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르고 있음.

- 정책연구 분야의 처방적 연구는 ‘있어야 하는 정책’에 대한 제안을 위해서 정책수단과 정책목표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파악하여 이를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과제인데,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학으로서 사회과학이 요구하는 과학적 방법론의 기준을 따라야 함. 정책연구의 처방적 연구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론으로는 비용-편익 분석, 실험설계, 통계분석이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 방법론을 수용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정책연구는 독립적인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전문 분야의 ‘지식을 정책에 활용하는 응용학문’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론연구는 앞에서 과학에 대한 논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논리적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법칙과 같은 명제, 즉 지식을 생산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하는 연구를 말함.
 - 사회과학에서 이론연구는 정책연구와 지역연구의 기초가 되는 이론을 만든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초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평가절하되고 있음.
 - 국제관계의 경우 이론연구에 중점이 적은 반면 지역연구와 정책연구를 강조하면서 국내 정책연구와 지역연구에 활용되는 대부분의 이론은 구미학계에서 나온 이론을 차용하는 경향이 있음.
 - 지역연구와 정책연구의 공통점은 통합적 특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상 고유한 학문 영역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국내학계의 정치학 및 국제관계연구의 경향

- 국내 정치학계는 행태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정한 변화가 나타났음.
 - 정치학 연구가 규범적(normative) 연구에서 실증적(positive) 또는 과학적(scientific) 연구로 그리고 객관적 혹은 기술적 설명을 주로 하는 서술적(descriptive) 연구에서 인과 메커니즘을 제시하려고 한 인과적(causal) 설명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해왔음.
 - 행태주의와 실증주의의 전환이 가져온 긍정적 영향은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분석기법의 확산과 새로운 이론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점이라 할 수 있음.

- 실증주의적 전환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① “연구가 제기하는 연구질문이 현실적, 역사적, 정책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의 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과 ② “새로운 연구가 기존의 이론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과 이론을 제시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학문적 공헌이 있는가 여부에 있음.
 - 실질적으로 한국 정치학계의 연구를 평가하는 과정에 사실상 실증주의적 연구가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은 미미한 편입에 반해 연구 경향에 대한 논의에서는 크게 다루어지는 측면이 존재함.
- 『한국정치학회보』에 출간된 연구논문을 분석한 권혁용 교수의 논문을 요약하여 보면 한국 정치학 및 국제정치 관련 연구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음. 우선 주제별 분포에 있어서 편중성을 보이고 있음.
- 연구의 세부 전공별로 보면 비교정치 분야가 76.1%라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국제관계는 22.9% 그리고 정치학 방법론은 1%를 차지하고 구체적으로는 선거 및 투표 연구가 9.6%, 국가 및 거버넌스 연구가 14.6%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정치학 연구에서 국제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음.
 - 국제관계 분야에서는 안보와 관련한 연구가 17.4%를 차지하는 반면 국제정치경제는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제안보 분야에서 국제관계이론은 1.5%, 동맹 및 외교정책은 12.4%, 전쟁은 1.8%, 비전통안보는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제정치경제 분야에서는 통상 및 국제무역 1.6%, 국제금융 0.9%, 그리고 지역통합 및 지역공동체는 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험적 연구 사례의 국가별 분포를 보면 지역적 편중과 그로 인한 이론의 일반화를 소홀히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정치학 연구의 전체 분야에서 이용된 경험적 사례의 분석을 보면 46%가 한국과 북한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은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하는 사례가 13.5%, 미국이 8.5%를 차지하는 점에서 지역적 편중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세계적으로 다수 국가를 사례로 포함하는 경우는 5.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일반이론 또는 사회과학의 일반화된 지식을 추구하는 이론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반증함.
- 연구에 사용된 방법론을 기준으로 보면 정량분석(quantitative)보다 정성분석(qualitative)에 치중함으로써 이론의 일반화를 추구하는 데 한계를 보임.

**국내 정치학계는
규범적 연구에서
실증적 또는 과학적
연구로 그리고 객관적
혹은 기술적 설명을 주로
하는 서술적 연구에서
인과 메커니즘을 제시
하려고 한 인과적
설명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해 왔음**

**연구에 사용된
방법론을 기준으로
보면 정량분석
(quantitative)
보다 정성분석
(qualitative)에
치중함으로써 이론의
일반화를 추구하는 데
한계를 보임. 최근에
들어되면서 전체적으로
정량적 분석이 20%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엇갈리는
평가가 제기됨**

- 정성적 연구방법을 채택한 연구가 49%인 절반에 달하고 여기에 정성적인 연구를 주로 하고 단순한 통계수치를 제시하는 연구 30%를 합하면 정성적 연구가 80%에 달하고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 또는 분석통계(analytic statistic) 그리고 가설검증의 과정으로 회귀분석을 적용한 연구는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계량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최근 시기로 올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국제정치논총』의 경우는 비율이 낮아져 계량적 연구방법이 80년대에는 1%에도 미치지 못하다가 1990년대 후반에 와서야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에 들어서면서 전체적으로 정량적 분석이 20%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엇갈리는 평가가 제기됨.
 - 전체 정치학연구를 모수로 설정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20%는 과대추정이라는 주장과 과소추정이라는 주장이 있음. 과대추정의 근거는 정량분석은 소장학자들에게 편중되어 있고 최초의 논문게재를 한국정치학회보를 이용한다는 점과 과소추정의 근거는 다른 학술지를 포괄하면 사실 정량분석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임.
 - 『국제정치논총』이 『한국정치학회보』에 비해 국제관계 관련 논문 비율이 높지만 계량적 연구방법의 비율이 낮다는 점을 볼 때 사실상 다른 학술지에서도 특별히 계량연구의 비율이 『한국정치학회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할 근거는 없음.
- 계량분석의 비율이 가장 낮은 분야가 국제안보와 정치경제 분야로 평균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계량분석의 빈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정치과정 및 정치제도 분야(36%)인데 이는 선거연구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국제안보와 정치경제 분야는 각각 6.5%와 6.4%로 나타남.
 - 선거와 관련된 정치과정 및 정치제도 분야를 제외하면 나머지 분야는 연구의 90% 정도가 정성적 연구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국제관계연구에서 계량적 분석의 증가는 크지 않음.
- 협의의 계량분석 방법뿐 아니라 새로운 과학적 방법론이 적용되고 시도되는 다양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사례선택의 자의성(selection bias)과 사례의 과소와 변인의 과대(too many cases and too few cases)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최대유사체계(most similar system design)와 최대상이체계(most dissimilar system design)의 활용
 - 수학적 논리와 명제를 활용한 모델화(formal model)를 시도하는 게임이론과 이를 새로운 형태로 적용한 전망이론(prospectus theory)의 접근법도 활용

- 통계적 기법에 있어서도 전통적 회귀분석은 물론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회귀분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로짓(logit)이나 프로빗(probit) 분석이 활용되고 시계열분석(time series)과 교차시계열분석(cross-sectional time series) 그리고 시계열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는 오차수정모델(error correction model) 등 방법론의 다양화 경향이 나타남.
- 지역연구와 국가사례연구는 개별 사례에 대한 이해(idiosyncratic)와 법칙과 같은 일반이론의 개발(nomothetic)로 대조를 이루어 왔다는 점에서 사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한국의 정치학 연구는 지역연구에 치중하여 정치학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사례연구 사이의 논쟁 자체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어왔음.
 - 1990년 초에는 전체 정치학연구의 60~70%가 지역연구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비판은 선행연구 또는 선배학자에 대한 비판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변화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30%대로 감소한 적도 있지만 여전히 전체연구의 절반 정도가 지역연구로 나타남.

4. 반론과 재반론

- 경험주의(empiricism), 행태주의(behavioralism), 또는 실증주의(positivism)로 불리는 정치학의 특정 접근법만이 과학적인가?
 - 과학은 누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 새로운 접근이 나타나서 기존의 과학적 접근보다 효율적이면 과학적 접근의 자리는 대체되는 것임.
 - 실증주의가 제시하는 과학의 기준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맘에 들지 않는다, 동의할 수 없다” 등의 평가도 가능하지만, 그런 평가의 근거가 되는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할 책임이 있음.
- 사회과학은 일반화라는 목적을 내세워 사회과학적 법칙의 명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별국가나 특정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간과하고 피상적인 논의만 함.
 - 개별 개체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개체의 특수한 특성에 집착하여 중요한 원칙을 간과하는 것은 분석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은 서술에 그치게 됨.
 - 육체적 능력이 뛰어난 개인에 대해서 육체적 및 정신적 측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만으로는 과학에 기초한 일반화된

*실증주의가 제시하는
과학의 기준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맘에 들지 않는다,
동의할 수 없다” 등의
평가도 가능하지만,
그런 평가의 근거가 되는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할 책임이
있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모두 객관적이고자
노력은 하지만 궁극적
이고 완벽한 객관성의
달성은 불가능함.
다만 객관성을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며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에 비해서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사회과학의
객관성을 포기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의학지식을 달성할 수 없음. 국가의 경우에도 개별국가의 특수한 측면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과 이해만으로는 국가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음.
- 일반이론이 작성되면 그 이론에 근거해서 특정 사례에 접근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할 수 있으며 개별 사례에 대한 적용과정에 과학적 이해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음.
 - 사회과학에서 수행하는 정책분석 또는 지역연구를 하는 과정에 객관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이에 기초한 과학적 이론만이 항상 중요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회과학은 규범이나 도덕적 가치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 아닌가?
 - 이 논의는 자연과학은 가치중립적이고 사회과학은 가치지향적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나온 주장인데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임.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혜택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주제가 선택되고 연구가 수행됨. 곤충이나 미생물 연구는 인간의 질병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금속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에 대한 연구는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수행됨.
 - 다시 말해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모두 객관적이고자 노력은 하지만 궁극적이고 완벽한 객관성의 달성은 불가능함. 다만 객관성을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며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에 비해서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사회과학의 객관성을 포기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사회과학의 가치지향성이 객관성을 포기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사회과학이 추구해야 하는 연구주제 선정에 있어서 가치지향성과 연구 방법론의 객관성이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하지 않으며 최악의 경우에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개념을 통해서 객관성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인권에 대한 연구가 주제는 주관적으로 선택되었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객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사회과학은 이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가치지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과학적 연구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엄밀한 과학적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할수록 객관적인 이해가 증진되고 이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와 규범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짐.
 - 경제학의 실업과 인플레이션, 정치학의 인권과 민주주의, 국제정치외교의 전쟁과 협력에 관련된 주제는 가치지향적이지만 연구의 수행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전제할 근거는 없음.
 - 사회과학적 이론이 엄밀한 방법을 통해서 법칙에 가까운 명제를 찾는다 하고 하지만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고 할 만큼 무수한 예외 상황이 있다면 과학적 연구의 가치는 무엇인가?

- 일반적 법칙을 발견했지만 예외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예외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가 과학의 진전임. 자연과학에서도 항생제로 치료되던 일반적인 박테리아에 반해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이해가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출발점이 됨. 이 밖에도 달 모양의 변화, 공룡의 멸종, 기후변화, 이 모든 자연과학에서 관측되는 예외 현상에 대한 이해가 과학의 지평을 확대해왔음.
 - 사회과학에서도 새로운 현상 또는 이변은 예외라는 이름으로 항상 존재하고 있음. 예를 들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은 서로 상반되는 현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됐지만 예외적인 상황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이해는 경제학적 지식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제출됨.
- 정책연구의 경우는 국내의 다양한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물에서 정책에 대한 분석을 할 뿐 아니라 이론적 연구에서도 정책제안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론 자체보다는 정책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사회과학에서 정책연구와 이론연구 모두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학문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은 연구주제의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
 - 정책연구가 비과학적·비이론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책학과 정책연구 분야에서도 인과이론을 전제로 가설을 설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과 과학으로서 사회과학이 요구하는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연구가 사회과학의 엄밀성과 배치되는 것이 아님.
- 지식의 생산 vs. 지식의 소비 그리고 창작 vs. 응용
- 지식의 생산은 새로운 법칙의 발견이며 이는 창작에 비유되지만 기존의 이론을 이용하여 정책 현상이나 지역적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의 응용은 지식의 소비에 해당됨.
 - 지식의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한 구분을 국제관계라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본다면 국제관계 현상과 관련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의 수반, 관료, 의원, 이를 보도하는 언론, 이를 지켜보고 평가하는 대중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소비자에 해당되며 이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도 배우는 사람은 당연히 소비자이고 가르치는 사람도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에 해당됨.
 - 지식의 생산과정 및 생산자는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행위, 국제관계 현상을 이해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보도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의 틀을 만드는 최초의 행위가 지식의 생산
 - 지식을 응용하는 것은 지식의 소비행위이며 정책연구의 경우 복잡한

*사회과학에서
정책연구와 이론연구
모두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학문적 정당성을 부여
하는 것이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은
연구주제의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

**이론연구뿐만 아니라
정책연구나 지역연구도
과학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과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우선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을
제시해야 함**

정책 현상에 대한 중간생산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소비의 수준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지식의 생산과정을 1차 산업에 그리고 정책연구를 2차 산업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 과학적 연구와 그렇지 않은 연구를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이론연구뿐만 아니라 정책연구나 지역연구도 과학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과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우선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을 제시해야 함. 연구를 통해서 알아내고자 하는 지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어진 분야에 이론적 그리고/ 또는 정책적 공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 요구됨.
 - 제시된 연구질문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및 정책적 정당성이 사전에 이루어진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제시되어야 함. 주어진 연구주제로 다루었던 사전의 연구들이 어떤 점에서 공헌을 했는지 명확하게 논의하고 이와 동시에 사전 연구들에 존재하는 빠진 부분, 틀렸거나 잘못된 부분, 수정이 필요한 부분, 새로운 접근이 가능한 부분, 또는 유사하지만 새로운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그 부분을 연구자가 수행함으로써 주어진 주제에 대한 이해에 공헌할 것이라는 정당화가 필요함.
 - 새로운 이론을 검증하는 과정에 요구되는 자료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이 과학적 연구의 출발임. 어떤 경우에는 연구자가 새로 발견한 중요한 문서나 자료를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주장의 근거로 이용하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연구경향은 역사연구, 정치사나 외교사와 같은 인문학적 접근에서는 모르되 사회과학에서는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는 것이 필요조건임.
- 과학적 연구의 기준이 지나친 형식에 집착하는 나머지 오히려 훌륭한 연구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 과학적 조건으로 제시된 연구질문과 사전연구에 대한 고찰은 형식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내용적 필요사항으로 학문적 분석과 정책보고서, 정책분석, 논설, 수필, 단상, 기고, op-ed 등 정치 및 국제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사람들의 지적활동과 구분하는 기준이 됨.
 - 정치 문제와 관련하여 무수하게 쏟아지는 글 중에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를 의도하지 않는 객관적 분석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담보하는 것이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논문임.

5. 결론: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싱크탱크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무엇이 싱크탱크를 강하게 만드는가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이론적 발견을 추구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연구기관으로서 가장 바람직함.
 - 이론의 발견은 지식의 생산과정이고 이론을 응용한 정책의 분석은 지식의 소비과정
 - 연구자의 기본임무는 이론의 생산이며 이론의 소비는 연구자 이외의 모든 주체가-학생, 교사, 관료,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문학자, 교사, 노동조합원-당사자가 될 수 있음.
 - 다시 말해서 연구자의 존재 의미와 책임을 구분해주는 핵심이 이론의 생산이며 연구자로 구성된 집단인 연구기관이 수행해야 할 기본 임무도 이론의 생산이 일차적 목표
-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에서 이론은 거대이론이 아니라 중범위이론 이하의 세부적인 이론을 의미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이론을 언급하면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또는 현실주의의 체계이론과 같은 거대이론(macro level theory)을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런 이론은 과학적 기준에 비추어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이라고 하기 어려움.
 - 중범위이론 중에서도 패권안정화(hegemonic stability)이론이나 장주기(long cycle)이론 같은 경우도 인류역사에서 단일의 사건에 가까운 특별 사례라는 점에서 이론을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 국제관계에서 과학적 기준에 맞는 새로운 이론으로는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관심전환이론(diversionary theory)을 사례로 들 수 있음.
 - 기존의 관심전환이론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정책결정자들은 국내정치적인 정책실패가 있는 경우, 여론의 비판을 회피하고자 외교정책에 있어 국제적 위기나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여론이 단결하여 지지하는 랠리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를 노리고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
 - 실제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사례를 경험적으로 분석할 때, 이러한 diversionary effect에 대한 분석의 결과가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정책결정자들이 여론의 관심을 회피하기 위해서 분쟁에 개입하는

*이론의 발견은 지식의
생산과정이고 이론을
응용한 정책의 분석은
지식의 소비과정*

**거대 담론차원에서
이론이 아니라 현실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낮은
단계의 이론(micro
level theory)의
개발은 새로운 이론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정책연구
또는 지역연구에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

정책결정뿐 아니라 외교적 협력사건도 활용하는 정책결정의 양방향 성향이 있었다는 점을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이론의 발전이 이루어짐.

- 새로운 이론의 발견은 기존의 이론이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설명함으로써 이론적 발전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지식의 생산에 해당되며 연구자가 생산한 지식을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지식산업의 분업임.
- 거대 담론 차원의 이론이 아니라 현실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낮은 단계의 이론(micro level theory)의 개발은 새로운 이론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정책연구 또는 지역연구에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
 - 대외정책과 관련한 연구자의 보고서 내용에 새로운 것이 없고 어떤 정책적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은 지식의 소비자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으로, 연구자가 기존의 이론을 설명하고자 하는 특정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지식의 소비과정으로 그 이론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 굳이 새로운 것이 있다면 그 현상에 그 이론을 접목한 것 정도라고 할 수 있음.
 -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사이버네틱스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아무런 이론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기사나 스토리텔링(소설)이 될 수 있음.
 -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말은 분석의 결과 기대되는 변수의 상호관계를 논의하는 것이 정책적 함의 부분인데 명확한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검증하지 않으면 “이런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는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와 같은 양방향적 예측을 제기함으로써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
- 문제는 연구에 관해서 알고 있는 내용과 실제로 수행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임.
 - 앞에서 논의한 내용은 과학적 연구의 기본적인 요구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이론의 수립을 위한 가설의 수립과 검증의 과정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대안이 있으면 우회하는 편을 선택함.
 - 이론이 검증을 통해서 확립되었을 때, 향후에 벌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현실과 상이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음.

주석

- 1) 이동운 신라대 교수의 ‘지역으로서 동아시아’ 강의 교재 참조, 위치는 아래와 같음.
http://etp.silla.ac.kr/club_board/content.asp?idx=3742&table=78_cafe_20129305522&c_idx=78&page=1&intYear=2012&intTerm=2&eduSeq=1492&strSubjectCode=43001

참고문헌

- 오철호·최영출. 2010. “정책연구의 회고와 전망: 통섭 논의를 위한 탐색,”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0, No.1, pp.407-434.
 전성홍. 2002. “한국의 지역연구 과제: 필요성, 정체성, 방향성 인식의 혼란 극복을 위하여,” 『국가전략』 제8권 2호. pp.29-53.
 조기숙. 1998. “한국에서의 지역연구: 정체성과 방법론,” 『세계지역연구논총』 제12집. pp.7-34.

❖ 저자 약력

■ 이성우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저서로는 『2011 한국인의 평화관: 통일정책과 여론』 및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편집: 이지영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지혜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2013

“New Waves in Asia”

May 29-31, 2013
Haevichi hotel&resort, Jeju
Republic of Korea

– Hosts



– Organizer



– Sponsors

